

여야, 예산안 오늘 처리...3년 연속 법정시한 넘겨

'정쟁성 예산' 끝장대치에 민생예산 '줄속심사' 지적

해마다 계속돼 온 예산안 능자 처리가 올해도 되풀이됐다.

여야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하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56조9000억원 규모의 주요 항목별 증·감액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 2000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제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예산안은 법정시한(12월 2일)을 무려 19일 초과한 것이다. 3년 연속 지각 처리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한 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나란히 고개를 숙였다.

극적인 합의 직후였던 데다 싸늘한 여론을 의식한 듯 협상 지연의 책임을 상대에 넘기는 언급은 삼갔다.

'예산안 수난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쟁점 예산을 둘러싼 여야 기 싸움에 실질적 협상은 법정 시한이 임박해서야 물살을 탔다. 여야의 벼락치기 협상에 '민생 예산' 심사는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고, 줄속 심사 우려도 잇따랐다.

과거 여야는 상습적인 능자 처리를 막기 위해 2014년 국회법을 고쳐,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제

를 도입했지만, 고질병은 금세 도졌다.

첫해인 2014년과 2020년 두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한을 어긴 것이다. 지난해에는 법정시한보다 무려 22일 늦은 12월 24일이 돼야 처리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가장 늦은 기록이었다.

올해도 여야의 강 대강 대치에 예산안 협상은 파행이 이어졌다.

법정시한을 훌쩍넘나드고도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연구개발(R&D)·세만금·지역화폐 등 쟁점 항목을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예산안은 법정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12월 9일)도 훌쩍 넘겨서야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예산안 시준만 되면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의 습관성 '예산안 지각 처리'를 뿌리 뽑으려면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산안 심사 착수 시점이라도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통상 정부 예산안은 매년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10월 국정감사' 탓에 본격적인 심사는 11월이 돼야 본격도에 올랐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을 정밀 심사하기 위해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달 13일이 돼야 열렸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쟁점 예산에 목매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측면도 있다"며 "심사 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2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24년도 예산에 대한 최종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추경호 경제부총리,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원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 국회 복지위 통과

'지역의사제법'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서 찬성 13표, 반대 2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법 제정안은 의대 정원 일부를 지역 의사 선발 전형 등을 통해 선발,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해 지역의사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지역의사의 범위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로 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 역시 야당 주도로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각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회 농해수위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처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와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육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 식용 및 도축, 유통상인 등 관련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연합뉴스

국힘 '한동훈 비대위' 출범 초읽기...비주류도 찬성 전환

윤재옥 대행 간담회·여론조사 당내 의견 수렴 거쳐 확정할 듯 의원 3분 2 찬성 '추대' 형식 영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영입과 관련 당내 비주류도 찬성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당내 기류는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방향으로 정리된 모양새다. 영입 형식은 '추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전일 비대위원장으로 정치 경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그는 야당의 '대통령 아바타' 비판에 대해서도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반박했다.

한 비주류 중진 의원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다른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별히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며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직을 통해 대권 도전 발판을 마련하려 하지 않겠

나. 약점을 보완하고 (윤 대통령 없이) 홀로서기를 도모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비주류 의원은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말릴 방법이 없다"며 "어쨌든 본인이 심사숙고한 뒤 하겠다고 한 것이니, 막을 방법이 없으면 도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장관 발언을 볼 때 의원총회를 열더라도 3분의 2는 찬성할 것 같다"며 "그 정도면 추대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도 비대위원장 인선을 놓고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상임고문단 오찬 간담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에 대한 원로들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그는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 사퇴 후 14일 중진연석회의, 15일 의원총회, 18일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등을 통해 당내 여러 의견을 들었다.

윤 권한대행이 이날 원로들의 의견을 듣고 당내 여론조사까지 끝내면 비대위원장 인선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윤 원내대표가 당원들의 의

견을 모아 내년 총선 승리,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 등판 시기가 이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이 심각한 위기 상황인 만큼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더 힘을 얻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지금 절박한 국민의힘 입장에서 애프터이저 대신 메인 메시지를 바로 시작하는 느낌이다. 시점적으로 너무 이르다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내년 1월 수많은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기 전 극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이 오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 당정 관계 정립,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한 장관이 와서 잘하면 족박, 아니면 대박"이라며 "윤상과 각을 세우거나 당내 팀워크를 다지며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박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 장관의 개인 능력과 참신함은 훌륭하지만, 연발연초 썩특검 등 민주당 프레임에 걸려들어 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집 나간 중도와 청년층에 한 장관이 소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invitation to Gwangju

내일이 빛나는 광주로 기업인을 초대합니다

광주광역시 투자기업과 함께
당당하고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어갑니다.

01
우수하고 다양한 인구 인프라

02
기업이 원하는 분야별 다양한 우수인력

03
국내 유일 국가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04
미래차국가산단과 소부장특화단지 지정 모빌리티 투자 최적

05
최첨단 산업단지 최상의 기업환경 제공

06
차별화된 광주만의 투자인센티브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투자산단과** Tel. 062-613-3880, 3882~3884. Fax. 062-613-4069

www.gwangu.go.kr